

‘과일간식 지원 사업’ 과수농가·학교 모두 “좋아요”

농식품부, 2022년까지 초등 전학년 학생 총 268만명에 제공 확대키로 학교 관계자 87% 긍정적 평가

정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과수농가와 학교 양쪽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268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올해 첫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영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 공급되는 과일간식은 사과, 배, 딸기 등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10가지 과일을 사용하며 도내 6개의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품목별로 나눠 공급된다.



지난 4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올해 처음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시작된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올해 농식품부에서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돌봄교실은 1·2학년 중심의 ‘초등돌봄교실’과 3~6학년 중심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모두 포함된다. 2017년 기준 전국 6054개 초등학교의 1만1980개 돌봄교실에 24만5303명이 참여하고 있

다. 농식품부는 전체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씩 주 1~3회, 연간 30회의 과일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작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아동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산 과일 소비도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43개 초등학교의 158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과일간식을 주 3회(10주) 제공한 학생들의 비만율이 제공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학교 관계자 중 86.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96.9%가 시범사업이 학생의 즐거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과수농가 또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과수농가에 안정적인 공급처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일간식을 초등돌봄교실로 공급할 경우, 연간 과일 소비량은 1542톤 정도로 추정되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공급할 경우 연간 1만7228톤을 추가로 소

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과일간식을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돌봄교실 대상 24만 명으로 시작해 2019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해 89만명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해 268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리 농가에서 수확한 과일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과일간식 사업으로 초등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확립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등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과수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아울러 과일이 컵 과일 등 신선편이형태로 공급되는 만큼 HACCP인증을 받은 가공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본격 돌입

산업부, 6월 말까지 225명 우선 채용

2013년 응시자 3198명에 응시기회

정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6월 말까지 225명을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행점검 T/F 회의를 통해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채용시험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달 8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피해자를 구제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시험에는 2013년 시험 당시 5268명의 응시자 중 청탁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된 자, 중복지원자, 인·적성 미달자 등을 제외한 3198명에게 응시 기회를 줘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용인원은 225명으로 예비합격자를 뒤 부정합격자 퇴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가 늦춰질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강원랜드 운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채용비리가 근절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원랜드 포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근절 및 개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큰절하는 박원순 시장 내외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난희 여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경로당에서 가회동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수출 중소기업·중견 환변동 보험지원 연장

6월 15일까지 보험료 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6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사항은 기존 0.02~0.03%의 일반

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00만 달러 → 300만 달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올 6월 개최 예정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해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미국대금리 3% 돌파, 미 증시 급등락 등 주요 이벤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환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합동점검

보건공단, ‘과로사 예방사업’ 추진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100개소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

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돼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60년 만에 개편

‘출입국·외국인청’ 등 쉽게 바뀌 체류관리·난민 업무 등 범위 확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을 바꾼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

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 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다.

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거론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가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법종 기자 joker@